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핵심사업 실현 위한 주요부처 방문 활동 집중 추진

전북도는 내년도 주요사업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편성 전부터 부처 방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최근 정부 예산 편성기조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어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미래신산업,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 잼버리 등 도정 핵심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활동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부처단체에서 최대 예산을 담기 위해서다.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이날 농식품부,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 등을 방문해 부처 실국장을 만나서 사업지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주요 분야별 부처 건의사업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 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10억원, 도내 농생명 분야 연구인프라와 연계한 '농축산용 복합유용미생물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비 45억원, 글로벌 수준의 국가검정기준에 맞는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설계비 5억원, '김제용지 가금밀 집지역 축사 매입' 사업비 90억원을 건의했다.

또한, 군산항 자동차 수출물동량 확보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 역할을 할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구축비 50억원,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건의와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구축', '협동화공장 운영을 위한 스마트 JV(Joint Venture)센터 건립' 사업비로 각각 국비 15억원, 1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해, 옛 전라도 4개 시도(전북, 광주, 전남, 제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천 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국비 5억원, 동화농민혁명명 정부기념일(5.11) 지정으로 동화의 역사적 의미 가치를 확대시키기 위

한 '동화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비 167억원 반영으로 사업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전했다.

이밖에 새만금 개발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예타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빠른 완료와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시 국제공항에 걸맞는 규모 및 사업비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내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5억원을 반영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4월)전인 3월중에 지휘부 등이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해 국가사업으로 필요성, 지역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 등 주요 3개 부서를 18, 26, 27일 연이어 방문하고, 더불어 민주당 및 지역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20, 27일 개최 추진하는 등 정치권 설득도 병행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백설기 전달하는 김두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일환으로 화이트데이의 사랑 대신 우리 쌀 백설기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백설기데이'가 14일 원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두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이 연구원들에게 백설기를 나눠주고 있다.

이 총리 "일부 연예인 일탈 충격... 경찰, 끝까지 추적해야"

"불법촬영 영상 유포, 인격 말살하는 반인륜 범죄 전직 경찰 비호 의심에 수사 결과가 응답해야"

성접대 및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이 14일 경찰에 동시 출석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까지 수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일탈이 충격적이다. 특히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인격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마저 버젓이 저질러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승리와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 언급된 것과 관련, "경찰의 유착 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법처리된 전직 경찰관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 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 결과가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혹업소나 특정 계층의 마약 범죄 등 일탈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겠다"며 "국세청 등 관계



기관도 유사한 유혹업소 등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의법조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이 곧 끝난다"며 "지금까지도 많은 의혹이 남아 있고, 진실에 관한 증언들도 새롭게 공개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의혹을 전혀 남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었고, 정부는 화력발전소 출력 제한 등 비상차감조치를 취했다"며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해주지만,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세계는 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빠르게 확대한다"며 "세계에너지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발전설비 투자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68.6%나 됐다. 중국도 2017년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치 규모에서 이미 세계 1위로 도약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나 우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위축됐고 국제 경쟁에서도 크게 뒤처졌다. 그런데도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억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계속해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하루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력산업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유효한 대응 수단으로 키워야 한다"며 "새로운 길을 가는 도정은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새로운 분야, 새로운 시장 개척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 분야가 함께 지혜를 내고 지원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북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실시

전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개별주택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후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결정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

차로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도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및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분 포함) 291,368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1만5,684호를 제외한 27만5,684호이며, 공동주택은 41만8,273호이다.

주택가격 열람에 앞서 지난 3월 초 주택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마무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쳤다.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각 시군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

을 경우, 내달 4일(목)까지 방문 및 우편, FAX를 통해 시군 주민센터나 세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은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4월 17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또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되어 각종 조세 부과기준이 되고 동시에, 건강보험료 산정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오늘 소환 조사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후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소재 조사단 사무실로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조사 중이며, 그 일환으로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

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춘천(6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 때문에 '보유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조사단은 경찰에 윤씨가 사용한 저장매체 등에서 발견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 1만여건이 검찰 송치과

장에서 누락된 정황이 발견됐으며 경찰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뺀 나머지는 검찰에 송치했다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63)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구치소 조사를 시도했지만, 최씨의 거부로 불발됐다. 최씨는 "김 전 차관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부인하는 상태다.

한편 조사단은 오는 31일 활동기간 만료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 법무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